

출제유형분석

총론	4	재무행정론	3
정책론	4	정보화사회와 행정	2
조직론	2	행정환류	-
인사행정론	4	지방자치론	2

01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높이고 그 역할을 확대하는 민간화(privatization)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진입규제 강화
- ② 바우처 제공
- ③ 할부계약 (contracting out) 활용
- ④ 공동생산 (co-production)

해설 ① [X] 진입규제는 전통적인 경제적 규제방식으로 민간화와 거리가 멀다. 민간화는 공공서비스의 제공이나 이를 위한 재산의 소유에서 정부의 영역을 줄이고 민간의 영역을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민간위탁(할부계약, contracting out), 면허, 보조금, 바우처, 자원봉사자 방식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다.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27, 47~50

▶ ①

02 다음은 예산의 이용과 전용에 대한 설명이다 ㉠과 ㉡에 해당하는 것은?

이용은 국회에서 승인된 예산 중 (㉠) 간 울타리를 뛰어 넘어 자금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면, 전용은 (㉡) 간 울타리를 뛰어 넘어 자금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

㉡

- | | |
|---------------|-------------|
| ① 장 | 관, 항, 세항, 목 |
| ② 장, 관 | 항, 세항, 목 |
| ③ 장, 관, 항 | 세항, 목 |
| ④ 장, 관, 항, 세항 | 목 |

해설 ③ [X] 이용은 입법과목인 ㉠ 장-관-항 간의 상호용통을 의미하며, 전용은 행정과목인 ㉡ 세항 - 목 간의 상호용통을 말한다.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651

▶ ③

03 의사결정모형 중 쓰레기통 모형의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진빠기 결정
- ② 의사결정을 구성하는 네 가지의 흐름
- ③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 ④ 갈등의 준해결

- 해설** ①, ②, ③ [○] 쓰레기통 모형은 조직화된 혼란상태(무정부 상태)에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네 가지 요소(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가 독자적으로 흘러 다니다가 어떤 계기로 교차하여 만나게 될 때 결정이 이루어진다.
- ④ [×] 갈등의 준해결은 회사모형의 특징이다.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256~258

▶ ④

04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방교부세의 기본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줄임으로써 기초적인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 ② 세외수입은 연도별 신장률이 안정적이며 그 종류와 형태가 다양하다.
- ③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의 지방교부세가 운영되고 있다.
- ④ 대부분의 국고보조사업에는 차등보조율이 적용되고 있다.

- 해설** ② [×] 세외수입은 지방 간 불균형성과 회계연도 간 불규칙성이 강하다.
- ③ [×]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 ④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분의 국고보조사업은 기준보조율이 적용되며, 필요에 따라 차등보조율이 적용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①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류,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제10조 【차등보조율의 적용】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빼는 차등보조율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 있다.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850, 855

▶ ①

05 정부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 ②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규제영향분석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관료에게 규제비용에 대한 관심과 책임성을 갖도록 유도한다는 점이다.
- ④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두고 있다.

- 해설** ④ [×] 규제개혁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다.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 【설치】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행정규제기본법의 주요 내용〉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 활동	• 대통령 소속. 위원장 2명(국무총리+대통령이 위촉하는 1人)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
규제법정주의	•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며,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 사전심사	•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or 강화 시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 • 예비심사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or 강화 시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 요청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35

▶ ④

06 행정 조직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발생하는 갈등 요인이 아닌 것은?

- ① 개인의 이기적인 태도
- ② 기능이나 업무의 특성에 따른 분업구조
- ③ 제한된 자원의 하위 부서 간 공유
- ④ 업무의 연계성으로 인한 타인과의 협조 필요성 증가

해설 갈등의 원인에는 개인적 원인과 조직적 원인으로 나눌 수 있다.

- ① [X] 개인의 이기적인 태도, 성격, 가치관의 차이 등은 갈등의 개인적 원인이다.
- ②, ③, ④ [O] 기능이나 업무, 자원 부족과 할당, 제도의 규정과 미비, 집단 간 특성, 업무 연계성 등은 조직적 원인에 해당한다.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417

▶ ①

07 공무원 교육훈련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현장훈련(on the job training)은 피훈련자가 실제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무수행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방법이다.
- ② 강의, 토론회, 시찰, 시청각교육 등은 태도나 행동의 변화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 ③ 액션러닝(action learning)은 소규모로 구성된 그룹이 실질적인 업무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내고 그 과정에서 성찰을 통해 학습하도록 하는 행동학습(learning by doing) 교육훈련 방법이다.
- ④ 감수성훈련 (sensitivity training)은 대인관계의 이해와 이를 통한 인간관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 ② [X] 강의, 시찰 등은 지식의 축적을 위한 훈련방법이다. 태도나 행동의 변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은 감수성 훈련, 사례연구, 회의 등이다.

〈훈련의 목적에 따른 훈련방법의 유형〉

지식의 축적(습득)	독서, 강의, 토의, 시찰, 사례연구
기술의 연마	시범, 사례연구, 토의, 전보, 견습, 연기
태도·행동의 변경	연기, 시범, 사례연구, 토의, 회의, 감수성 훈련, 전보, 영화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497, 498

▶ ②

08 정책평가의 논리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내적타당성이란 다른 요인들이 작용한 효과를 제외하고 오로지 정책 때문에 발생한 순수한 효과를 정확히 추출해 내는 것과 관련되는 개념이다.
- ② 내적타당성을 위협하는 성숙요인이란 순전히 시간의 경과 때문에 발생하는 조사대상집단의 특성변화를 말한다.
- ③ 진실험설계의 주요 형태 중 하나인 단일집단 사전사후측정설계는 동일한 정책대상집단에 대한 사전측정과 사후측정을 통해 정책효과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 ④ 결과변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제3변수들을 식별하여 통계분석모형에 포함시킨 후 정책효과를 추정하는 것은 비실험적 설계의 한 예이다.

해설 ③ [X] 단일집단 사전·사후측정설계는 실험집단만을 대상으로 정책의 시행 전과 시행 후를 측정해 효과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진실험이 아닌 비실험적 방법의 주요 형태이다.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298~300

▶ ③

09 로위(Lowi)는 강제력의 행사방법과 강제력의 적용영역 차이에 따라 정책을 네 가지(A - D)로 유형화하고, 정책유형별 특징과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강제력의 행사방법 \ 강제력의 적용영역	개별적 행위	행위의 환경
간접적	A	B
직접적	C	B

- ① A에서는 정책내용이 세부단위로 쉽게 구분되고 각 단위는 다른 단위와 별개로 처리될 수 있다.
- ② B에는 선거구 조정, 정부조직이나 기구 신설, 공직자 보수 등에 관한 정책이 포함된다.
- ③ C에서는 피해자와 수혜자가 명백하게 구분되며 정책결정자와 집행자가 서로 결탁하여 갈라먹기식(log-rolling)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
- ④ D에서는 지방적 수준에서 분산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해설

강제력의 행사방법 \ 강제력의 적용영역	개별적 행위	행위의 환경
간접적	A 분배(배분)정책	B 구성정책
직접적	C 규제정책	D 재분배정책

- ③ [O] 규제정책(C)은 정책결정 시 정책 수혜자와 피해자를 선택하게 됨으로써 피해자와 수혜자가 명백하게 구분된다.
- ④ [X] 재분배정책(D)은 고소득층으로부터 많은 조세를 징수하여 저소득층에게 사회보장지출을 하여 소득의 재분배를 도모하는 정책이다. 따라서 지방적 수준이 아닌 중앙정부 수준의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로위의 정책유형별 특징〉

분배정책	권리나 이익, 또는 서비스의 배분 / 포크배럴, 로그롤링 현상이 발생 수출 특혜 금융,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급, 주택자금 대출, 국유지 불하, 농민 을 위한 영농정보 제공 등
재분배정책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이전 / 계급 대립적 성격으로 치열한 갈등 누진소득세 제도, 영세민 취로사업, 임대주택의 건설 등
규제정책	개인이나 일부집단에 대한 권리행사의 제한이나 의무부과 ① 경쟁적 규제 : 다수 경쟁자 중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특정권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정책 . 방송국 설립인가, 항공노선 허가 ② 보호적 규제 : 일반 대중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규제정책 최저임금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구성정책	체계의 구조와 운영에 관련된 정책 / 대외적 가치배분에는 영향이 없지만, 대내적으로 게임 의 법칙발생, 총체적 기능과 권위적 성격을 나타냄. 정부기관 신설, 선거구 조정 등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188~191

▶ ④

10 루빈(Rubin)의 '실시간 예산운영(Real Time Budgeting)'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입 흐름에서 의사결정 - '누가, 얼마만큼 부담할 것인가'에 관한 의사결정으로 의사결정
의 흐름 속에는 설득의 정치가 내재해 있다.
- ② 세출 흐름에서 의사결정 -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에 관한 의사결정으로서 선택의 장치로
특정지어지며, 참여자들은 지출의 우선순위가 재조정되기를 바라거나 현재의 우선순위를
고수하려고 노력한다.
- ③ 예산 균형흐름에서 의사결정 - '예산 균형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관한 의사결정으로
제약조건의 정치라는 성격을 지니며, 예산균형의 결정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범위 및 역할
에 대한 결정과 연계되어 있다.
- ④ 예산 과정 흐름에서 의사결정 - '계획된 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사결정으로 기술
적 성격이 강하고 책임성의 정치라는 특성을 지니며, 예산계획에 따른 집행과 수정 및 일
탈의 허용 범위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다.

해설 루빈의 실시간 예산운영(real time budgeting) 모형은 서로 성질이 다른 그러나 서로 연결된 세
입, 세출, 균형, 집행, 과정의 다섯 개 의사결정 흐름이 통합되면서 초래되는 의사결정 모형을
말한다.

- ④ [X] 예산 집행 흐름에서 의사결정의 특징에 해당한다. 예산 과정 흐름에서 의사결정은 어떻
게 예산을 결정하는가, 특히 누가 예산을 결정하는가의 정치다.

〈루빈의 실시간 예산운영〉

세입흐름에서 의사결정	누가 얼마만큼 부담할 것인가? - 설득의 정치
세출흐름에서 의사결정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가? - 예산획득을 위한 경쟁과 예산의 배분에 관한 의사결정
예산 균형 흐름에서 의사결정	예산균형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 제약 조건의 정치의 성격
예산 집행 흐름에서 의사결정	예산 계획에 따른 집행과 수정 및 일탈의 허용 범위? - 기술적 성격, 책임성의 정치
예산 과정 흐름에서 의사결정	어떻게 예산을 결정하는가? 누가 예산을 결정하는가?

▶ ④

11 기존 전자정부와 비교한 스마트 전자정부의 특징이 아닌 것은?

- ① 개인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②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 TV 등 다매체 활용
- ③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개발
- ④ 1회 신청으로 연관 민원 일괄처리

해설 ③ [X] 스마트 정부란 개인별 맞춤서비스, 중단 없는 서비스, 실시간 정보공개 등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먼저 알아서 개개인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공급자 중심X)를 제공하는 정부를 말한다.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725

▶ ③

12 월슨(Wilson)의 행정연구(The study of Administration, 1887)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개혁을 통해 특정지역 및 계층중심의 관료파벌을 해체하고자 했다.
- ②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을 강조했다.
- ③ 정치와 행정을 분리하고자 했다.
- ④ 효율적 정부 운영에 관심을 두었다.

해설 ① [X] 월슨은 정당정치의 오염으로부터 행정을 탈출시켜 비효율과 낭비, 부패를 청산하여 좋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②, ③, ④ [O] 월슨은 정치부터 행정영역을 확립하는 정치행정이원론(행정경영이원론)을 주장하였다.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8, 9, 117

▶ ①

13 관료제 병리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동조과잉과 형식주의로 인해 '전문화로 인한 무능' 현상이 발생한다.
- ② 피터의 원리(Peter principle)가 지적하듯이 무능력자가 승진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 ③ 장관의 권위에 의존하면서 소극적으로 일을 처리하려는 할거주의가 나타난다.
- ④ 목표가 아닌 수단으로서의 규칙과 절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번문옥례(red tape) 현상이 나타난다.

해설 ① [X] 전문화로 인한 무능(훈련된 무능)은 한 가지 지식 또는 기술에 관하여 훈련받고 기존규칙을 준수하도록 길들여진 경우 변동된 새로운 조건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③ [X] 할거주의란 관료제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조직구성원들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부서만을 생각하고 다른 부서에 대해 배려하지 않는 편협한 태도를 말한다.
④ [X] 규칙과 절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목표대치이다. 번문옥례는 불필요한 문서처리가 늘어나는 문서주의를 말한다.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345

▶ ②

14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엽관주의는 행정의 민주화에 공헌한다는 장점이 있다.
- ② 실적주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다.
- ③ 잭슨(Jackson) 대통령이 암살당한 사건은 미국에서 실적주의 도입의 배경이 되었다.
- ④ 엽관주의는 공직의 상품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해설 ③ [X] 미국의 실적주의 도입은 1850년대부터 시작된 엽관주의에 대한 개혁 운동의 결과이다. 특히 1881년 가필드 대통령이 암살당하면서 엽관주의가 쇠퇴하고 1883년에 제정된 펜들턴법을 계기로 실적주의가 확립되었다.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447~449

▶ ③

15 예산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입법부가 사전에 의결한 사항만 집행이 가능하다는 사전의결의 원칙의 예외로는 긴급명령과 준예산 등이 있다.
- ② 예산총계주의는 모든 세입과 세출이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③ 정부가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을 직접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한계성 원칙의 예외로는 예비비, 계속비 등이 있다.
- ④ 예산은 결산과 일치해야 한다는 예산 엄밀성의 원칙은 정확성의 원칙이라고도 불린다.

해설 ③ [X] 특정 세입과 특정 세출을 직접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통일성의 원칙이다. 통일성 원칙의 예외로는 목적세, 수입대체경비, 특별회계, 기금 등이 있다.

<전통적 예산원칙>

원칙	내용	예외
공개성의 원칙	국민들에게 공개!	국가정보원 예산 등
명확성의 원칙	이해하기 쉽고 단순·명확해야!	총액계상예산
사전의결의 원칙	미리 국회가 의결!	전용, 사고이월, 준예산, 긴급명령, 선결처분
정확성의 원칙	예산과 결산이 일치!	적자 or 불용액의 발생
한정성의 원칙	① 목적 외 사용금지	이용과 전용
	② 계산된 금액 내 집행	예비비, 추가경정예산
	③ 회계연도 독립	이월, 계속비, 앞당기어 총당·사용
단일성의 원칙	가급적 단일회계 내에 정리!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 기금
통일성의 원칙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금지!	목적세, 수입대체경비, 특별회계, 기금
완전성의 원칙	모든 세입·세출이 나열되어야!	전대차관, 순계예산, 수입대체경비, 기금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587~591

▶ ③

16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민투표제도, 주민발안제도, 주민소환제도가 모두 시행되고 있다.
- ② 『지방자치법』은 주민감사청구 요건으로 시·군·자치구의 경우 19세 이상 주민 5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 적이 있다.
- ④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설 ② [×] 지방자치법 상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6조 【주민의 감사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830~839

▶ ②

17 비교행정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독자적인 연구대상을 확정하기가 어렵다.
- ② 환경과 행정의 교류적 관계를 경시한 정태적 접근이다.
- ③ 처방성과 문제해결성을 강조함에 따라 행정의 비과학화를 초래하였다.
- ④ 행정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함으로써 행정의 독자성을 무시하고 행정의 종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해설 ③ [×] 비교행정론은 각국의 행정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행정학의 과학성을 높이고, 일반화된 행정이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방법이다. 비교행정은 문화횡단면적이고 일반법칙적인 연구를 추구하였으며, 행정학의 과학화에 기여하였다.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128, 129

▶ ③

18 메이(May)는 정책의제설정의 주도자와 대중의 관여 정도에 따라 정책의제설정과정을 네 가지 유형(A - D)으로 구분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책의제설정의 주도자 \ 대중의 관여 정도	높음	낮음
민간	A	B
정부	C	D

- ① A는 외부집단이 주도하여 정책의제 채택을 정부에게 강요하는 경우로 허쉬만(Hirschman)이 말하는 '강요된 정책문제'에 해당된다.
 ② B의 경우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가진 집단은 대중들에게 정책을 공개하여 지지를 획득하려고 한다.
 ③ C에서는 이미 민간집단의 광범위한 지지가 형성된 이슈에 대하여 정책결정자가 지지의 공고화(consolidation)를 추진한다.
 ④ D는 정부의 힘이 강하고 이익집단의 역할이 취약한 후진국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해설 ② [X] 내부주도형(내부접근형)의 경우 의사결정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집단들이 정책을 주도하는 모형으로 정책의 대중적 확산이나 정책경쟁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경우 나타나는 모형이다.

정책의제설정의 주도자 \ 대중의 관여 정도	높음	낮음
민간(사회적 행위자)	A 외부주도형	B 내부주도형(내부접근형)
정부	C 굳히기형	D 동원형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213

▶ ②

19 공무원 보수제도 중 연봉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② 고정급적 연봉제에서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된다.
 ③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에서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된다.
 ④ 성과급적 연봉제와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의 성과연봉은 전년도 업무실적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된다는 점에서 유사한 면이 있다.

해설 ② [X] 적용대상이 정무직인 고정급적 연봉제는 기본연봉으로만 구성된다.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되는 것은 직무 성과급적 연봉제(고위공무원단)와 성과급적 연봉제(과장급)이다.

〈공무원 보수제도 - 연봉제〉

보수제도		적용 대상	보수구조					
			기본급여	성과급여(지급기준)				
연 봉 제	고정급적 연봉제	정무직	기본연봉	—				
	직무 성과급적 연봉제	고위 공무원단	기본연봉 (기준급+ 직무급)	성과 연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매우미흡
					15%	10%	6%	0%
	성과급적 연봉제	과장급	기본연봉	성과 연봉	최상20%	상위30%	하위40%	최하10%
					7%	5%	3%	0%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528

▶ ②

20 고충민원 처리 및 부패방지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 ②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감시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감사청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 ③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해설 ② [X] 국민감사청구제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라 감사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 【감사청구권】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의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사원장(이하 "당해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감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559, 561

▶ ②